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5-학인-00001(00007, 00011, 00013 병합)

강제 자율·보충 학습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1. ○○○(○○고등학교 2학년 재학)

2. ◇◇◇(○○고등학교 2학년 재학)

3. □□□(○○고등학교 2학년 재학)

4. △△△(○○고등학교 2학년 재학)

피 해 자 ○○○고등학교 학생들

피 신 청 인 ●●●(○○고등학교 교장)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고등학교는 2015학년도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지 않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 학생들의 ‘정규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참여여부를 다시 물어,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장학지도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위와 같은 사례는 전라북도 소재의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례 전파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고등학교장에게,

○○고등학교 교사들이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이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1. 13.(화), 3. 5.(목), 3. 23.(월), 3. 24.(화)

나. 신청인 : 1. ○○○(○○고등학교 2학년 재학)

2. ◇◇◇(같은 학교 2학년 재학)

3. □□□(같은 학교 2학년 재학)

4. △△△(같은 학교 2학년 재학)

다. 피 해 자 : ○○고등학교 학생들

라. 피신청인 : ●●●(위 학교 교장)

마. 신청요지 :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요받고 있고, 학생들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1) 신청인 1.

선생님들이 보충 수업 참여 강요를 물리적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것도 강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신청인 2.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보충수업 참여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가 대놓고 보충을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학생이 보충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런 상황은 강제적인 것 같다.

3) 신청인 3.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

#### 4) 신청인 4.

교육활동 동의서에 부모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활동 동의서를 나누어주고 선생님이, “어차피 다해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나. 피신청인 및 참고인의 주장

##### 1) ◆◆◆(위 학교 교감), ●●●(위 학교 교장)

방과후 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학부모들에게 ‘교육활동 동의서’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자필서명을 받아 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이에 따라 예체능 활동, 학원, 요리수업 등의 다른 활동을 하는 1학년 27명, 2학년 48명, 3학년 46명(총 121명의 학생)들이 방과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학습 등의 다른 활동을 하는 1학년 7명, 2학년 22명, 3학년 34명(총 63명)의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강제로 방과후 자율학습 및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 2) ■■■(위 학교 ○학년 부장, 국어 담당)

2015. 3. 9. 경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한 후, ‘교육활동 동의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이후의 참여의사를 확인했다. 각 학년의 각 반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교육활동 동의서를 배부하고, 위 동의서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일부 학급의 경우,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나누어준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 3) ㉹㉹㉹(위 학교 ○학년 수학 담당)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시간에 수학교과 진도를 진행하였다. 2015년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위와 같이 수학진도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선 진도를 빨리 나가고, 이후에 남은 시간에 보충 문제를 푸는 등 보충을 하겠다고 했다.

현재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모두 참여 여부를 학생에게 묻고, 학생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선 학생과 상담하고, 상담 후에도 학생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 부모와 전화로 상담을 한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참여하지 않게 한다.

### 4) ㉹㉹㉹(위 학교 ○학년 ○반 담임, 영어 담당)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만약 강요하였다면 학생들이 극소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참여해야겠지만, 현재 학생들의 50~60%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여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학년 ○반에는 총 37명의 학생(유도부 소속 2명 포함)이 있는데, 야간자율학습은 20여명, 보충수업은 29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장, 교감이 관리자로서 담임교사들에게 압력을 넣어 ‘학생들이 보충과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학년 ○반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참여 동의서’를 나누어 주고, ‘참여 여부를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불참 의사를 표시한 학생은 학부모와 통화한 후 참여하지 않게 했다.

‘위 동의서를 나누어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참여에 표시하도록 한 후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학급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일 수는 있지만,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위 동의서 내용이나 제출 방식에 대하여 모여서 협의한 적은 없다.

#### 다.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 1) ㉠(위 학교 ○학년 ○반 재학, 문과), ㉡(위 학교 ○학년 ○반 재학, 이과) 면담 결과

방과후 학교 교과프로그램(보충수업)은 ○학년 ○반 학생 중 5명이 불참하고 있고, 야간 자율학습은 학원 때문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어, 10명대 후반에서 20명대 초반 가량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는 자율적이어서, 빠지겠다는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다 허락하신다. 담임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남아라, 정말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면 안 되니까 가라”고 이야기하신다.

교육활동 동의서 작성은 각 반마다 다르다. ○학년 ○반은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나누어주고 부모님 동의도 받아 오도록 했는데, 귀찮아서 애들이 자기가 대신 사인해버린 경우도 있다. 어떤 학급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차피 할 거니까 그 자리에서 사인해라’고

한 학급도 있었다고 한다. ○학년 ○반은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나누어주고 부모님 동의도 받아 오도록 했는데, 부모님 동의를 안 받아온 애들이 자기가 대신 사인해서 낸 경우도 있다.

○학년 ○반(이과반)은 36명의 학생 전원이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야간 자율학습은 학원에 가는 학생 3~4명을 제외하고 다 참여하고 있다.

수학 보충수업 시간에 교과 진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과의 경우는 고3때까지 수학 4과목을 끝내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므로, 보충수업시간에도 진도를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수학 진도를 빨리 끝내고, 고3때는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보충수업을 받기 싫으면 당당하게 선생님과 면담하고 받지 않으면 되는데, 선생님에게 말하기 싫으니까 학생들이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애들이 보충수업을 안 받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왜 하기 싫냐?”, “너 공부 안하면 되냐?”고 자꾸 이야기하여, 어쩔 수 없이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 2)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 현장 조사 결과

- 대상학교 : ○○고등학교
- 조사일시 : 2015.3.17. 20:00~21:30
- 조사대상 :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일부
- 조사자 : 교육혁신과 장학사 ▣▣▣

### 가)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운영 실태

학년	재적 인원	조사 인원	방과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참여	희망	비희망	참여	희망	비희망
1학년	364	102	101	65	36	102	55	47
2학년	362	89	89	37	52	89	26	63

나) 의견이나 건의사항(130건)

- 강제로 방과후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을 하고 있음 : 84건  
예) '원하는 사람만 해야 함. 그 시간에 학원을 다니고 싶음.' 등
-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단축하여 주기 바람 : 21건  
예)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넘어가서 취미생활이나 학교 숙제, 잠 잘 시간이 부족함. 야간자율을 5일 모두 하는 것보다 3일에서 2일 정도만 하면 좋겠음.' 등
- 야간자율학습 시 자유로운 활동 보장 : 16건  
예) '복도에서 선생님 감독은 강제와 다름없음. 핸드폰 사용(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것), 화장실 허용, 공부 안한다고 교사 체벌, 보충학습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
- 야간자율학습 환경 개선을 원함 : 5건  
예) '독서실 같은 시설을 원함, 버스 운행' 등
- 기타 : 4건  
예) '방과후학교 보충시간에 보충교제를 너무 많이 삼' 등

#### 4.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참고인 면담 결과, 학생들 설문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정사실

1) 2015. 3. 위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이하 ‘보충수업’이라 함) 교육활동 동의서’, ‘방과후 자율학습(이하 ‘야간 자율학습’이라 함) 활동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학교 학생 중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7명, 2학년 22명, 3학년 34명(총 63명)이고,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27명, 2학년 48명, 3학년 46명(총 121명)이었다. 참고로 위 학교 학생은 총 1,121명이며, 위 학생들 중에서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의 불참율은 각 5.6%, 10.8%에 해당한다.

2) 위 각 동의서에는 학생의 성명, 학부모의 성명 및 서명(인)란이 있고, 보충수업 동의서는 참여여부 표시와 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야간 자율학습 동의서는 참여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3) 위 학교가 제출받은 동의서 중 다수의 동의서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 의하여 자필 서명이 된 것이다.

4)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은 동의서가 작성된 것은,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① 학부모에게 위 동의서를 보내지 않고, 동의서를 나눠 준 자리에서 학생에게 서명을 하도록 하여 바로 제출시킨 경우, ②

실제로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보냈으나, 학생들이 학부모의 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대신 서명하여 제출한 경우

5) 위 학교는 2015학년도 보충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교과프로그램 구성과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의 5과목만을 선택 운영하여 일괄 배정(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고 학교에서 정함)하였다. 특히 수학 확률통계 과목(이과만 해당)의 보충수업은, 원래 정규교과 진도를 진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과의 진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 나. 판단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는, 학생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6조(타인에 대한 학습권 존중 및 학습 선택권 보장)는, 위와 같은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받

은 동의서 중 일부는, 해당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학생들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63명 및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121명 외에도, 자신이 희망하지 않았지만 위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위 학교가 2015학년도 보충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위 인정 사실 5)항과 같이 운영한 것은, 학생들이 정규교과 시간과 마찬가지로 보충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이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학교 학생들은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참여 여부를 정하거나, 보충수업의 편성 및 그 운영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학교는 위 학생들의 '정규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는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각 학급의 교사들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이는데,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의 참여가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참여여부를 다시 물어,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례는 전라북도 소재의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례 전파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30.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 [별지] 관련 규정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규정하여 학생은 정규교과시간 이외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